

2012

DIPLOMATIC

WHITE

PAPER





# 제 4 장

## 경제·통상 외교 강화

제1절 G20 및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강화외교 .....	116
제2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	125
제3절 에너지·자원협력 외교 .....	142
제4절 녹색성장 외교 .....	146
제5절 양자·다자 통상외교 .....	151
제6절 통상투자진흥외교 .....	177

## 제1 절

# G20 및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강화외교

### 1. 2011년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

2011년 세계경제는 국제유가 급등, 일본 대지진, 유로지역 재정문제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신흥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서도 여전히 호조를 보인 반면, 선진국 경제는 상반기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 및 일본 대지진, 하반기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유럽 재정문제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유로지역 및 일본 경제는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8월 이후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고 주요 선진국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volatility)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 2011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연율,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1년
미국	0.4	1.3	1.8	3.0	1.7
유로	3.1	0.6	0.5	-1.3	1.5
일본	-6.8	-1.5	7.0	-2.3	-0.9
중국	9.7	9.5	9.1	8.9	9.2

(단,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 2. 깐느 G20 정상회의 개최

### 1) 깐느 G20 정상회의 개요 및 준비과정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금년에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아이디어(New world, New ideas)”라는 주제로 11월 3-4일간 프랑스 깐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5개 비회원 초청국(스페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UAE, 싱가포르)과 7개 국제기구, 즉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가 참석하였다. 정상회의에 앞서 부대행사로 11월 2-3일간 B20(비즈니스 서밋)과 L20(노동서밋)이 개최되었다.

깐느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각료급으로 재무장관회의(2월, 4월, 10월), 재무·개발장관(9월), 농업장관(6월), 고용노동장관 회의(9월) 등이 개최되었으며 연중 세르파 회의, 차관·고위급 회의(재무, 농업, 고용노동, 에너지), 실무그룹(개발, Framework, 국제통화체제, 화석연료보조금, 화석연료가격변동성, 청정에너지/에너지효율성, 해양환경보호, 반부패), 패널/연구그룹 회의를 통해 의제별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 2) 깐느 G20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깐느 정상회의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신흥국 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정상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 금융규제, 글로벌 거버넌스, 무역, 개발, 농업, 고용노동 등 이슈를 주로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정상 코뮤니케, 정상 선언문, 성장과 고용을 위한 깐느액션 플랜 등을 채택하였다.

우선 정상들은 유럽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IMF 재원 확충 필요성에 합의하고 재무장관들이 구제 재원충원방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성장과 고용을 위한 깐느 액션플랜을 채택하여 단기적인 신뢰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을 명시하고 중기적으로도 구조조정 등 경제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들에 합의함으로써 세계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IMF의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IMF와 지역안전망간 협력 원칙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금융기관으로 인한 리스크 축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체계에 합의하고 FSB를 강화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금융시장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편 정상들은 2013년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고 신규무역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하기로 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자유무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DDA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협상방안을 모색해 보고, WTO 체제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G20 통상장관들에 지시하였다.

또한 서울정상회의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을 이행해 나가면서 인프라 분야 지역사업추진, 식량안보 행동계획 등 구체 성과를 도출하고 개발을 G20의 주요의제로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의장국인 프랑스의 요청으로 빌게이츠는 혁신적 개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혁신적 개발 재원마련 방안으로 담배세, 국제항공 해운세, 다양한 금융관련 조세를 검토해 볼것을 제안하였으나 국가들간 이견으로 구체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정상들은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효과적인 대응능력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G20이 정상 주도의 비공식 협의체로서 성격을 지속 유지하면서도 트로이카 체제를 제도화 하고 G20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G20 비회원국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회의 개최 의장국을 결정(러시아·호주·터키 순으로)하고 2016년부터 아시아부터 지역별로 순회하기로 하는 의장국 개최원칙을 확정하였다.

그 외에서 G20 정상들은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에너지시장의 투명성 제고, 농업 생산성 증진 및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청년실업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G20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합의를 도출하였다.

### 3) 간느 G20 정상회의 결과 평가

유로존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기로에서 개최된 간느 정상회의는 비록 유로존 재정위기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나 IMF 재원확충 필요성에 합의하는 등 유럽차원의 위기 해결 종합 패키지에 합의함으로써 유로존 위기가 크게 악화되는

것을 막고 문제 해결의 체제와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 규제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개발 분야 인프라 사업 추진 등 기존 합의 의제의 충실한 이행과 농업 등 신규 이슈에 있어 식량안보 행동계획, G20 거버넌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G20이 국제경제협력 논의를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G20 트로이카 제도화, 운영지침 마련, 아웃리치 체계화 등은 G20 제도화를 가져올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며 향후 G20의 신뢰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4)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여

이번 깐느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이카 의장국(전(한국)·현(프랑스)·차기(멕시코)의장국으로 구성)의 일원으로서 G20의 다양한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 G20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깐느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과감한 구조개혁 경험을 소개하며 그리스 등 유로지역 당사국들의 단호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또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IMF 재원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합의도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건전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국제유동성이 없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국가들을 돕기 위하여 지역안전망과 IMF간 협력원칙을 마련함으로써 IMF 대출제도가 더욱 개선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발의제에서 개발작업반 공동의장역할을 수행하며 개도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인프라 개발과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G20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조치 동결원칙을 재확인하는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청정에너지·에너지효율성 실무그룹회의 공동의장직을 맡아 청정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녹색성장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밖에도 G20 의장국 선정 원칙을 확정하고 아웃리치 강화와 G20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G20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G20 체제를 정비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기업인의 모임인 G20 비즈니스 서밋(B20)의 창시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일 프랑스 전경련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서 국가정상으로는 유일하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국민의 뛰어난 역량을 빛내고 국가 위상을 크게 높일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포럼으로서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G20차원의 공조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통해 국제사회 이익이 되도록 합의를 촉진하는 글로벌 코리아 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 3.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에 대한 참여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동 : 중견회원국으로서의 역할 강화

2011년은 우리의 OECD 가입 15주년이자 OECD 설립 50주년인 의미있는 해로서 OECD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와 OECD와의 관계가 한층 심화되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가 OECD 설립 50주년 기념 각료이사회에서 참여하여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 종합보고서 채택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더 높였다. 또한, 우리는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OECD와 함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6.20-2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11.29-12.1)”를 개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OECD의 책임감있는 중진회원국의 모습을 보여줬다.

1961년 설립이후 5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기념하여 2012년 5월 25-26일간 개최된 각료이사회에는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녹색성장 세션에서 녹색성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구리아 OECD 사무총장으로부터 OECD의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를 직접 전달받음으로써 녹색성장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및 칸 일본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OECD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였으며, OECD는 OECD 50주년 비전선언문을 발표하였다.

OECD 설립 50주년 및 GGGI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OECD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색을 위해 우리 정부와 OECD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을 2011년 6월 20일부터 21일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2009년 각료이사회 의장 수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OECD와 공동으로 녹색성장 서밋을 개최함으로써 한·OECD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6월 21일 “한국과 OECD : 새로운 파트너십과 리더십을 향해(Korea and OECD: Towards New Partnership and Leadership)” 세션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발 등에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양자간 협력의 효용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와 공동으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11월 30일-12월 1일간 개최하여, 신흥개도국과 민간 등 새로운 개발주체의 등장 등 개발 의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계기 방한한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우리 대통령을 예방하고,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개발,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정책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한·OECD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개월에 걸쳐 실시된 OECD 뇌물방지협약<sup>1)</sup>의 국내이행에 관한 3단계 평가에서 뇌물방지에 있어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을 이뤄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4월에 서면평가, 6월에는 현장평가, 7-8월 평가보고서 검토과정을 거쳐 10월 정례회의에서 3단계 평가보고서와 OECD 보도자료를 최종 채택하였다. 뇌물방지에 있어 우리의 주목할 만한 진전은 우리 정부의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해되며, OECD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중견 회원국으로서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우리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활동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

<sup>1)</sup>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막아 공정경쟁을 통해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기준 OECD 34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남아공, 러시아 등 총 39개국이 협약당사국임(우리나라는 99년 가입, 국내이행법 발효)

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 2)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활동 : 한국의 역할 강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사회 분야 개발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ES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0년 인천에서 개최된 제66차 총회 계기 ESCAP 산하기구로서 인천 소재 동북아시아사무소를 개소하고, 아·태정보통신기술센터(APCICT :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의 상설화를 결정하였다.

제67차 UNESCAP 총회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회보호 및 개발에 대한 장기전망'을 주제로 2011년 5월 태국 방콕에서 62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한국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틀을 마련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非 G20 국가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기여를 소개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금번 총회에서는 인천 소재 동북아시아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동 지역사무소에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사무국을 두기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대다수 회원국들은 아태정보통신기술훈련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ESCAP 활동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아·태 지역 경제·사회 개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3) 민간포럼 참석 : 새로운 규범형성에 기여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주최하는 연차 총회(일명 '다보스포럼')는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다. 각국의 정·관·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그

해 세계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다보스 포럼은 한 해의 글로벌 핵심 이슈를 가늠해 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은 1월 26-29일간 “새로운 현실의 공통 규범 (Shared norms for the new reality)”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원이 한정된 세계에서 1차상품 가격 및 공급 안정화” 세션에 참석하여 졸릭(Zoellick) 세계은행 총재, 알리에프(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웨차치와(Vejjajiva) 태국 총리, 러드 (Rudd) 호주 외교장관, 플레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 등과 1차상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다보스 포럼 “글로벌 거버넌스 재구축 (Rebuilding Global Governance)” 세션에 참석하여 프랑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성과와 준비과정을 공유하였다. 한편, 사공 준비위원장은 전국경제연합이 주최하는 ‘한국의 밤(Korea Night)’ 행사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그간 이루어 낸 경제성장과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의의를 설명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역설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보스 포럼의 참석을 통해 세계경제질서 확립과 논의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책을 홍보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보아오 포럼(BFA; Boao Forum for Asia)은 매년 4월 중국 해남도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경제포럼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비전공유,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2011년에는 보아오 포럼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포용적 개발 : 공동과제와 도전 (Inclusive Development : Common Agenda and New Challenges)” 주제로 우리나라 김황식 국무총리, 후(Hu) 중국 국가주석,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대통령, 호세프(Rousseff) 브라질 대통령, 주마(Zum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빠떼로(Zapatero) 스페인 총리, 아자로프(Azarov) 우크라이나 총리 등 7개국 정상급 인사와 각국 정부, 기업, 학계 주요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고도성장이 야기한 양극화 문

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포용적 성장'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적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김황식 총리의 개막식 기조연설 모습

## 제2절

##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 1. 개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과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건수의 급증 등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 FTA 추진로드맵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주요국가와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진 노력의 결과, 2011년 말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총 7건, 44개국)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과의 FTA가 비준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이 우려되었으므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완성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페루, 터키, 콜롬비아 등 신흥시장 및 자원부국과의 FTA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었으며 8월 1일에는 한·페루 FTA가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2011년 10월에 미국 의회에서, 2011년 11월에 우리 국회에서 비준이 완료되어 2012년 3월 15일 발효 예정이다. 또한 콜롬비아, 터키 등 국가와의 FTA 협상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한편 동북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해, 중국과는 2010년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이후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간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일본과는 FTA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중이며, 2011년 12월에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 여타 FTA 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미 5개국과의 공동연구를 종료하였고 말레이시아와는 FTA 타당성연구를 개시하였다.

## 2. 미국, EU, 페루와의 FTA 비준·발효 추진

### 1) 한·미 FTA 비준

한·미 FTA는 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말 고위급 협상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서명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국내 정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비준 및 발효가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 26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개시에 합의하였다. 그 이후 2010년 11월 11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2007.6.30, 워싱턴)

일 G20 정상회의의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간 양국 통상장관간 추가 협상이 진행되어 합의가 도출되고, 2011년 2월 10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를 서명·교환하였다.

정부는 2011년 6월 3일 추가협상 결과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동의안은 2011년 9월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1년 10월 12일 한·미 FTA 이행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11년 10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하였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미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를 진행하였다.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공산품과 임수산물에서 전 품목을 예외없이 개방하기로 하였고, 즉시 철폐를 포함하여 5년 내 조기 철폐되는 품목이 품목수 기준 우리측 92%, 미측 92.8%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관세 철폐 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으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선택적·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하여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8월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향후 15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4억불, 대세계 무역수지는 27.7억불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실질 GDP는 5.66%, 소비자 후생은 321.9억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한·EU FTA 잠정발효

2007년 5월 6일 개시된 한·EU FTA 협상은 총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회담 등을 거쳐 2009년 7월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이 발표되었으며, 2010년 10월 6일 한·EU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이 이루어졌다.

한·EU FTA 발효를 위한 비준절차는 EU측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한·EU FTA 동 의안은 2011년 2월 7일 유럽의회 상임위원 국제통상위원회를, 2월 17일 유럽의회 본회의 를 각각 통과하였다.

우리의 경우, 2010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간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의 과정 중 제기된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협정문에 대한 전면적인 한글본 재검독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한·EU FTA 피 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등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한·EU FTA에 대한 비준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2011년 4월 28일 외교통상통일위원 회 및 2011년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EU 양측은 한·EU FTA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정 비 등을 마치고 2011 년 6월 21일 한·EU 수석대표간 이행 협 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었다.



한·EU FTA 잠정발효 기념 리셉션(2011.7.1, 외교통상부)

한·EU 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다.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 공산품에 대한 EU의 관세는 5년 내에 100% 철폐되고, EU 공산품 에 대한 우리의 관세는 5년 내 97%가 철폐될 예정이다. 관세철폐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과 지적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경쟁 등 모든 주요 무역규범을 망라하고 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 장이자 우리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며 대한민국 제1위 투자주체이다. 이러한 EU와의 FTA

는 우리 기업의 EU시장에 대한 접근을 크게 개선하고, 한·EU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와 EU 및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EU FTA 발효 후 6개월(2011년 7월 1일-12월 31일)간 한·EU간 교역은 EU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였다. 특히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인 승용차, 제트유 및 등유, 자동차 부품 등이 수출의 호조를 보여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수지 흑자(7.4억불 흑자) 기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EU 양측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11년 10월 12일 서울에서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한·EU FTA의 이행체제 수립 및 운영 방안, 협정이행 관련 한·EU간 주요 관심사항, 한·EU간 교역 증대를 위한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무역위원회 결정사항의 승인 및 2012년도 상반기 한·EU 무역위원회 산하기구 회의 일정에 합의하였다.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2011.10.12, 외교통상부)

또한 2011년 12월 23일 한·EU 양측은 한·EU 무역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한·EU 무역위원회 의사 규칙 및 일반분쟁해결 패널 명부를 채택하였다.

### 3) 한·페루 FTA 발효

한·페루 양국 정부는 보완적 성격이 강한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08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시 한·페루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5차례의 공식협상, 2차례의 회기간 회의, 3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2010년 8월 30일 페루 리마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틴 페레스(Martin Perez)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이 한·페루 FTA 협상 타결을 발표하

고, 이어 2011년 3월 21일 서울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페루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이 조기 비준 및 발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6월 29일 한·페루 FTA 비준 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한 달여 만인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가 발효하였다.

한·페루 FT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 분야에 있어서 양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농산물 셰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에서 기 개방한 분야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지하였고, 페루는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투자분야에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보다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우리 투자자의 페루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대페루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페루 FTA가 2011년 8월 1일 발효한 이후 2011년 말까지 5개월간 효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하고 수입은 37.9%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양국간 교역액은 33.3억불을 기록했으며, 이는 양국이 한·페루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2008년 교역량(16.2억불)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한·페루 FTA는 한·칠레 FTA에 이어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두 번째 FTA로서 우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는 GDP가 우리나라 GDP의 15%에 불과하지만, 2006-2010년간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대선이 있던 2011년에도 5.5%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등 중남미 국가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또한 페루는 아연, 주석, 납, 동 등 전략적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신흥산유국 및 천연가스 공급기지로서 현재 우리 기업이 남미 지역 중 가장 활발하게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이다. 한·페루 FTA로 페루는 우리의 전략적인 자원협력 파트너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3. 동북아 경제권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

#### 1) 한·중 FTA 추진 여건 조성

정부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민간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한·중 양국의 학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된 이후 2010년 9월부터 2011년에는 양국의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간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한편 한·중 양국은 그간 양국 총리 회담, 외교장관회담, 통상장관회담 등 각종 고위급 인사의 교류 계기에도 한·중 FTA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한·중 FTA 체결 필요성과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우리 농수산물 등 양국간 민감분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세미나, 간담회 및 토론회의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한·중 FTA 추진 필요성 및 협상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왔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중국의 대한 투자 유치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를 통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2만 3천여 개에 달하는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며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중 FTA 체결시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사한 농산물을 생산·소비하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폭 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협상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해 나가는 한편 중국측과는 협상개시 전 사전협의를 통해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한 양해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 지속

한국과 일본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일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농

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2008년 4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 2차례의 심의관급 실무협의, 2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일본내 비관세장벽(NTB) 문제 등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및 시장개방 수준 등 협상재개시 예상되는 주요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양국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과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간 협력 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일 FTA추진에 있어 현재 한·일간 상당한 규모의 무역역조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가 궁극적으로 대일 무역수지 개선과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기여하여 양국간 상호이익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일 FTA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3)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2009년 10월 10일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3국은 2010년 1월 준비회의를 거쳐 5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제1차 회의에서는 2012년까지 동 공동연구의 종료 등 공동연구의 운영세칙에 대해 합의하고, 6년(2003-09)간 진행되어 왔었던 민간공동연구의 결과와 3국의 경제·통상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이후 3국은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3국간 FTA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진행하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3월 30일-4월 1일간 제주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었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당초 2012년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가 종료 목표시한이었으나, 2011년 5월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종료 목표시한을 2011년 말까지로 조기 완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작업일정을 가속화하여 2011년 12월 14일-16일간 평창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

공동연구 보고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이슈(지재권, 정부조달 등 규범 이슈 및 수산, 식품 등 협력 이슈 포괄) 등 향후 3국간 FTA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각국의 산업 및 정책 현황, 3국간 FTA로 인한 영향 및 권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3국간 FTA가 실현가능하며,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3국 정부가 한·중·일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를 결정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는 2012년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3국은 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의 진전을 위한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4. 자원부국 · 신흥시장 국가와의 FTA 협상 진전

### 1) 한·호주 FTA 협상 진행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자원 수출국이자 농업개혁정책과 선진기술을 갖춘 농업선진국으로서, 자국의 주력품목인 광물자원과 농산물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공산품 수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호주 FTA 협상 논의는 2007년에 실시한 FTA 민간공동연구, 2008년 4월에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및 2008년 10월과 12월에 두 차례 개최한 예비협의를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2009년 1월 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2009년 3월에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그간의 협의 결과, 일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협정문 분야에서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였고, 상품양허 분야에서도 양국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으로 논의가 압축된 상태이다.

한·호주 FTA는 우리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도 도

움이 되며, 농업분야 협력을 비롯한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한·콜롬비아 FTA 협상 진행

콜롬비아는 중남미 3위의 소비인구(약 4600만명)와 제5위의 경제규모(약 2800억불 대의 GDP)를 갖추고 있는 중남미지역의 중견국가로서 최근 들어 치안안정과 더불어 안정적 경제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콜롬비아는 또한 중남미 5대 유망산유국이자 세계 10위 광물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우리나라로서는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콜롬비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FTA 체결을 통해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는 2008년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 3회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2011년에는 제5차 공식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 무역관련기술장벽(TBT), 경쟁, 통신, 전자상거래, 투명성 등 협정문 12개 챕터에 합의하였으며, 무역구제, 투자, 지적권 등 여타 미타결 챕터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 상품 시장접근 협상에서도 2011년말까지 3차례 수정양허안을 교환하여 주요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협상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9월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시 양국 정상은 연내 협상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모두 조속한 협상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은 협상타결의 최대관건인 상품시장 개방과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적 협상을 통해 협상을 진전시켜나갈 예정이다.

## 3) 한·터키 FTA 협상 진행

터키는 유럽 인구 2위(7,37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시장잠재력·거대시장 인접성 등 신흥시장으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post-

BRICs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 양국 수교 이후, 대터키에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흑자폭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교역량에서도 1977년 32백만 달러에서 2011년 59억 달러로 약 185배 증가 하였다. 하지만, 터키의 전략적 중요성과 전통적으로 우리의 우방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양국 간의 교역수준은 그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한·터키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양국간의 의견을 합치하고 양국간 FTA체결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2010년 3월 19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을라얀(Zafer Çağlayan) 터키 대외무역담당 국무장관은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터키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였다. 협상 출범 이래 한국과 터키는 2010년 4월과 7월, 2011년 3월 세 차례의 공식 협상과 소규모협상을 통해 상품 협정문과 통관·원산지 분야 협정문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하였다. 2011년 11월 간스 G20 계기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한·터키 FTA 조기 타결 의지를 확인하였다. 앞으로 양국은 잔여쟁점 타결을 통해 가급적 조속히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전시켜나갈 예정이다.

#### 4) 한·뉴질랜드 FTA 협상 진행

한·뉴질랜드 양국은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상호 투자 및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한·뉴 FTA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 FTA 민간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 정부간 라운드테이블 회의 및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가졌다. 국내적으로는 2009년 1월 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3일에 개최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5월까지 네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여 원산지, 서비스, 투자 및 기타규범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품 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이익균형에 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공식협상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후 한·뉴 정상회담(2010.7), 한·뉴 통상장관 회담(2011.2월, 12월)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뉴

FTA 협상 진전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 5)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연구 완료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중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ASEAN 거점국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파트너이다. 특히, 최근에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8대 교역국이자 대ASEAN 제1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기체결된 한·ASEAN FTA의 낮은 자유화 수준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경쟁국과 인도네시아간 양자협정의 설정으로 인해 자동차·철강 등 우리 주요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1년 2월 16일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에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고, 2011년 중 3차례 공동연구를 거쳐 2011년 11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한·인도네시아 CEPA 관련 공청회 개최를 완료하였고,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6)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완료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 후발국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으로, 우리의 제 6위 투자대상국이기도 하다. 특히, 베트남은 한·ASEAN FTA상 상품시장 자유화 일정은 여타 ASEAN국가에 비해 늦을 뿐만 아니라, 2007년 1월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의 MFN 관세가 한·ASEAN FTA 특혜관세율보다 낮아짐에 따라, 우리의 이익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한·베트남 FTA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9년 10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2010년 6월부터 총 6차례 공동연구를 거쳐 2011년 10월 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1년 11월 8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통상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7) 한·중미 FTA 공동연구 완료

2010년 6월 개최된 한·코스타리카, 한·파나마 정상회의시 FTA 추진 논의에 따라, 양측은 추진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 공동연구를 개시하였다. 동 공동연구에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외에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중미국가도 합류하였다. 2011년 5월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외한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5개국과의 공동연구가 완료되었다.

공동연구 결과 한·중미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양측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중미간 FTA 체결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미 국가들간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 8)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 연구 개시

2010년 12월 한·말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체결 가능성을 포함, 양자 교역·경제관계 심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1년 4월 타당성연구 운영지침(TOR)에 합의하고 2011년 5월 한·말 FTA 타당성연구를 개시하였다. 양측은 개별적으로 타당성 연구를 1년간 진행하여 상호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양측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에서는 KIEP, 말레이시아측에서는 통상산업부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2012년 초 한·말 FTA 타당성연구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타당성연구 종료 후에 협상개시 추진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 5. 기발효 FTA 이행 강화를 통한 활용률 제고

### 1) 한·ASEAN FTA 이행

한·ASEAN FTA 협상에서는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ASEAN 10개국과의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대부분의 FTA 협상에 사용되는 단일협상방식(Single Undertaking) 대신에 순차적인 협상방식을 적용하였다.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에 발효되었고,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1일과 2009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3개의 협정이 모두 발효됨으로써 2004년 11월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ASEAN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양측 정상이 합의한 한·ASEAN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이 완성된 것이다. 이와 함께, 상품무역 협정과 서비스무역 협정 서명에 불참하였던 태국이 2009년 2월 27일 2개의 협정에 대한 가입의정서에 서명하고, 2010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ASEAN 10개 회원국 모두에 대해 우리 기업은 한·ASEAN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타결되고 원활한 이행이 시작되면서 양측간 교역액은 협정 발효 이전인 2006년 618억불에서 2011년 1,250억불로 102%가 증가하여 2006년 말 우리나라의 제5대 교역 상대였던 ASEAN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 》》》 한·ASEAN FTA 발효 이후 교역증대

(단위: 백만불, %)

연도	대ASEN 수출액	대ASEN 수입액	교역액	무역수지
2006	32,066	29,743	61,809	2,323
2011	71,915 (124.3)	53,111 (78.6)	125,026 (102.3)	18,804 (709.5)

\*출처: 한국무역협회, ( )는 발효 이전 연도 대비 증가율

한·ASEAN 양측은 한·ASEAN FTA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2011년 3월과 6월 2차례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상의 제조자명 삭제, 원산지증명서의 추가페이지 도입 등 특혜원산지 활용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14차 한·ASEAN 정상회의(2011.11, 발리)에서 ‘한·ASEAN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를 서명하여 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절차 간소화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한·인도 CEPA 이행

한·인도 양국 정부는 갈수록 긴밀해지는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12차례의 공

식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거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발효되었다.

한·인도 CEP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 분야에 있어서 인도는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의 대인도 수출의 85%를, 우리는 품목수 기준으로 대인도 수입의 93%, 수입액 기준으로 대인도 수입의 90%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하였다. 양국의 상품시장 개방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 및 평균 관세율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WTO DDA 협상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특히 외국 전문 인력의 도입이 필요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등의 경우, 양질의 저렴한 인력이 보다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투자분야에서는 1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자유화하는 한편,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이후 양국 교역·투자·인적 교류가 급증하는 등 실질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수출은 43%가 증가하고, 수입은 37%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인도에 대한 수출이 11%, 수입이 39% 증가하여, 양국 교역액이 200억불을 돌파하였다. 이는 한·인도 CEPA 발효 전인 2009년보다 69.3% 증가한 것이다.

#### 》》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교역증대

(단위: 백만불, %)

연도	대인도 수출액	대인도 수입액	교역액	무역수지
2009	8,013	4,142	12,155	3,872
2011	12,686 (58.3)	7,893 (90.6)	20,579 (69.3)	4,792 (23.8)

\*출처: 한국무역협회, ( )는 발효 이전 연도 대비 증가율

한편, 한·인도 CEPA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이슈들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가 2011년 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는 동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인도 CEPA는 향후 인도와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 효과만 계산해도 앞으로 10년간 대인도 수출은 17억불, 무역흑자는 14억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인도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 속도,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 및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한·인도 CEPA의 실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3) 한·칠레 FTA 이행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2003년 2월 서울에서 협정이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에 발효하였으며, 2011년 발효 7주년을 맞이하였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발효 전인 2003년의 15.8억불에서 2011년 72.4억불로 약 4.6배 증가하였다.

한·칠레 FTA의 차질 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2010년 말까지 총 7차례의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FTC: Free Trade Commission)와 분야별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10년에 개최된 제7차 자유무역위원회(화상회의)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 6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칠레 FTA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양국의 FTA 정책 및 추진 현황과 무역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정 발효 6년간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협정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4) 한·EFTA FTA 이행

서유럽 강소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하여 2011년으로 발효 5주년을 맞이하였다.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량은 발효 이전 연도인 2005년의 29억불에서 2011년 70억불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한·EFTA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08년 5월 서울에서 한·EFTA FTA 제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 1월에는 제네바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에서 한·EFTA 양측은 한·EFTA FTA의 원산지기준, SPS/TBT, 협정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5) 한·싱가포르 FTA 이행

한·싱가포르 FTA는 2005년 8월에 서명되어 2006년 3월에 발효하였으며, 2011년으로 발효 5주년이 되었다.

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발효 전인 2005년 127억불에서 2011년에는 약 2.35배인 298억불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역량 및 수출액 증가는 한·싱가포르 FTA 체결 이전 사실상 무관세국가였던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셈이 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관계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교역증대

(단위: 백만불, %)

연도	대싱가포르 수출액	대싱가포르 수입액	교역액	무역수지
2005	7,407	5,318	12,725	2,089
2011	20,855 (181.6)	8,965 (68.6)	29,820 (134.3)	11,890 (469.2)

\*출처: 한국무역협회, ( )는 발효 이전 연도 대비 증가율

한·싱가포르 FTA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양국은 2009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1차 이행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행검토회의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의 발효 이후의 효과를 점검하고, 이행 관련 양국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협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 에너지·자원협력 외교

## 1. 에너지협력 외교 적극 추진

우리나라의 대외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6.5%이며 원유수입은 81.8%를 중동에 의존하는 등 취약한 에너지 수입구조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항상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그 결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요소로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에너지외교는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1년에도 정상급 에너지협력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에너지협력외교 인프라 확충과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녹색성장관련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원부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및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우리국익을 대변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활동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외교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2010년 10.8%→2011년 13.7%) 신재생에너지 수출도 전년대비 2배 증가(2010년 47억 달러→2011년 84억 달러)하는 결과를 거양하였다.

## 1) 정상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한 에너지 협력 분야 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2월 중앙아시아 순방중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38억불 규모의 발하쉬 발전소 건설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40억불 규모의 아프라우 석유 화학단지 건설 합자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는 40억불 규모의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석유, 가스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아부다비 대형광구 개발참여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상득 특사는 2011년 5월 페루를 방문하여, 자원 ·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1년 3월 몽골 외교장관과 면담하여 양국 에너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8월에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에너지 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2011년 7월 제6차 한 · 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중소형원자로(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은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2) 자원부국과의 포괄적 우호협력관계 강화

2011년에 정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 등과 에너지자원 협력관계 구축을 증진하고 플랜트, 인프라 건설 등의 신규사업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사절단을 16개국, 7차례에 걸쳐 파견하였다. 아프리카(1월: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카메룬), 중남미(3월: 페루 · 에콰도르 · 트리니다드토바고), 중동 · 아프리카(4월: 사우디 · 남북수단), 중앙아(5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6월: 기니, 11월: 케냐 · 탄자니아 · 시에라리온)

또한 지역별로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4월), 중남미 그린카라반(11월), 한 · 중앙아 협력포럼(12월), 한 · 중동 협력포럼(12월)을 개최하여 동 지역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을 강화하였다.

## 2. 국제에너지협력 및 사업지원

### 1)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설립, 운영 주도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출범한 IRENA의 21개 창립 이사국의 일원으로 선출되었으며, 6월·11월에 열린 1, 2차 이사회에서는 부의장국을 수임하였다. 또한 IRENA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턴 3명을 IRENA에 파견한 바 있다.

### 2) 원전진출 지원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알제리(1월), 사우디(4월), 태국(9월)의 원전대표단을 초청하여 국내 원자력 관련 산업시설 시찰을 지원하였고, 주한외교단(12월)의 고리원자력발전소 시찰을 지원하여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안전장관회의(6월, 파리), 국제원자력 협의(9월, 폴란드) 등 다자협력을 통해서 원전 안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폴란드, 태국, 체코, 사우디 등의 인사를 초청하고, 전문가 연수 등을 실시하여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원전수출을 지원하였다.

## 3. 에너지협력외교 인프라 확충 및 역량 제고

### 1) 에너지협력 외교 인프라 강화

2011년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유망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공관을 위주로 기존 75개의 에너지중점관리공관을 47개로 대폭 축소하여 에너지협력외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33개 공관에서 근무 중인 에너지 보좌관들은 주재국의 유망 프로젝트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현지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기여를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투르크메니스탄 보좌관은 최초로 외국 방송사인 KBS에게 ‘21세기 자원확보 경쟁’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취재를 허용하도록 교섭하였고, 우즈베키스탄 보좌관은 수르길 프로젝트(40억불) 보완투자 협정서 자문 및 탈리마잔 화력발전소 등 신규 사업 입찰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2) 에너지 자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전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중점관리공관 등 재외공관에서 수집한 주요 에너지광물관련 정보를 해외에너지자원홈페이지(<http://energy.mofat.go.kr>)에 실시간 게재를 통해서 적극 전파하고, 매주 ‘주간국제 에너지자원동향’을 에너지기업과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의 관계자 등 10만 여명에게 전자 메일로 배포하는 등 에너지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히 전달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에너지중점관리공관을 포함한 재외공관들의 에너지업무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관련 국내외 서적, 정책자료 등을 정기, 부정기적으로 배포하였다.

### 1.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외교

#### 1)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국제적 논의 주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외교통상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 브랜드화 및 국제적 패러다임 확산을 주도하였다.

2009년 6월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당시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안한 ‘녹색성장 선언문(Declaration on Green Growth)’이 채택되었으며, 2011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녹색성장 전략 종합보고서가 채택되어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5개년 계획’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기술하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설명과 함께 GGGI를 녹색성장전략 전파를 위한 향후 협력 추진대상으로 명기하였다.

2011년 5월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녹색성장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녹색성장 전략의 확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덴마크 국민방문 계기에 녹색성장 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정부, 국제기구, 학계, 경제계 인사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을 6월 서울에서 개최하여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2010년 6월 설립된 이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중국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전략 수립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정부의 공여금 확보 및 참여촉진을 위한 MOU체결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 2)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홍보

우리나라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더반 당사국총회) 등 각종 다자회의 및 양자회담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전 세계에 위치한 우리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및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각 공관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강연, 세미나, 언론기고 등을 통하여 대국민 이해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 2. 유엔 기후변화협상 대응

## 1) Post-2012 기후변화협상 현황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3)에서 채택된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은 기후변화협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트랙인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협상 작업반을 설치했고, 공유비전,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기술개발과 이전, 재정지원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또한, 2010년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칸쿤 기후변화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가 채택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당사국총회를 포함 총 4차례의 협상 회의가 개최되었고,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더반플랫폼’이 채택되어 교토의정서 연장,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11월 더반 당사국총회 계기 아주그룹회의시 아주그룹의 유대와 단결을 도모하고, 산유국이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제18차 당사국총회 각료급 준비회의(Pre-COP)는 한국에서 개최하고 COP18은 카타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2)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2009년, '2020년까지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권고한 최고수준의 감축범위로, 이는 강력한 녹색성장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서 선진국으로부터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제공하는 메카니즘인 개도국의 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등록부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엔기후변화총회의 핵심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각료급 준비회의(Pre-COP) 개최 등을 통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3. 환경협력 강화

### 1)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성장, 국가들 간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도 황사, 산성비, 해양오염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가 2011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전세계적 환경문제와 동북아지역의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2011년 8월 제16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어 양국의 환경정책 및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동북아 환경협력, 대기 및 해양오염문제 등에 대한 의

견을 교환하였고, 9월에는 제14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기후 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제6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생물다양성, 환경산업, 해양환경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이행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2011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SPEC: N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제16차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황사, 대기 및 해양오염, 생태계 보전 등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 한·중·일·러 동북아 역내 4개국이 참여하는 제16차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정부간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2012-201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12-2017년 중장기 전략, 사무국 위임사항 수정, 신탁기금 증액 방안, 사무국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상기와 같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로 산재된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총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해양 분야, 유해폐기물 및 화학물질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응을 위해 160여개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들이 유엔,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Ramsar)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화학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유해화학물질 사전 승인 통보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의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범지구적 환경협력 논의 차원에서는 2011년 10월 아시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어 우리나라가 제안한 “창원이니셔티브”가

당사국과 지역그룹의 지지를 통해 채택, 향후 이를 통한 국제적 그린리더십 발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밖에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 제5절

## 양자·다자 통상외교

## 1.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

## 1) 한·중 통상외교

한·중 경제·통상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2002년부터 우리나라 제2위 투자대상국이며,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및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중 간 교역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양국 교역액은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2,20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 »» 한·중 교역규모 추이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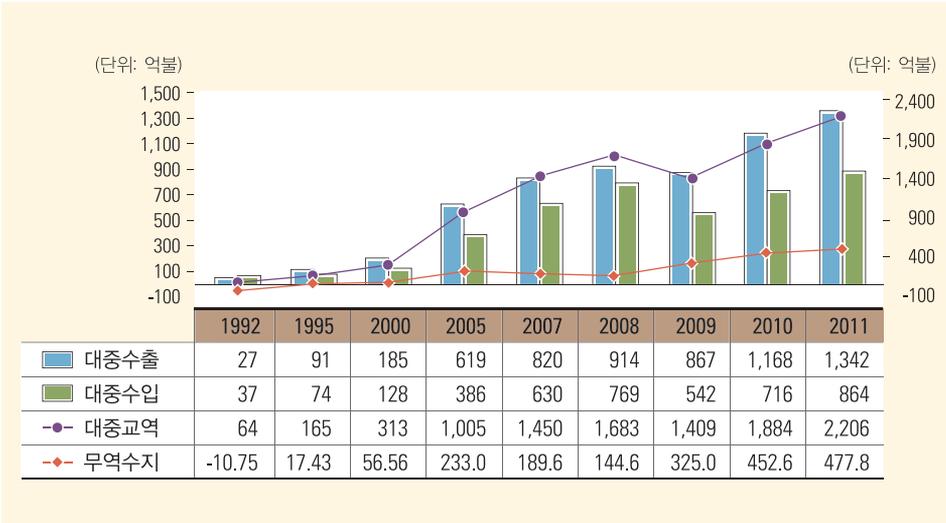
	1992년	2011년	증가량(배)
수출	27	1,342	▲ 50.6
수입	37	864	▲ 23.2
수지	-10.7	477.8	-
총액	64	2,206	▲ 34.6

\*출처: 한국무역협회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양국 교역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1년 교역액 2,2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2

년 양국 수교 이후 20년 만에 교역규모가 2,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중 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3,0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한·중 간 교역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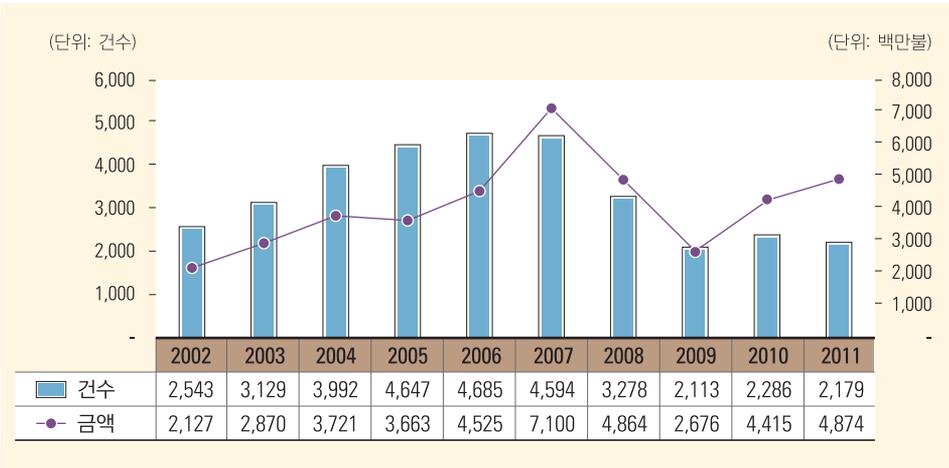


\* 출처: 한국무역협회

우리의 대중국 투자 누계 규모는 2011년 말 기준 44,586건, 502억 달러에 이른다. 2011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투자한 금액은 48.7억 달러이다. 반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누계 규모는 2011년 말 기준 37.4억 달러에 불과하나, 2009년 이후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진출 촉진 정책과 우리나라의 중국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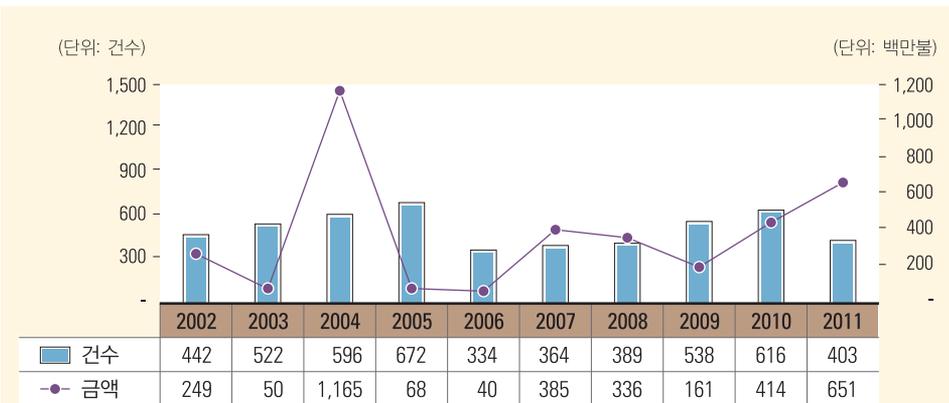
한·중 양국은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9년 10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 개정판에서는 정보통신·자동차·철강·조선·농업·금융·물류유통 등 23개의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동향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한 투자 동향



\*출처: 지식경제부

한편 양국 경제 · 통상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통상 마찰도 발생하고 있으나, 양국은 정상회담은 물론 통상장관회담, 경제공동위원회, 무역실무회담, 품질감독검사검역협약체 등 다양한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원만히 관리,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1년 두 차례 한 · 중 통상장관회담, 제18차 한 · 중 경제공동위(우리 수석대표: 통상교섭조정관), 제5차 한 · 중 품질감독검사검역협약체(우리 수석대표: 통상교섭조정관)가 개최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의 내수확대 및 지방 균형발전 정책 등을 활용하여 중국

중서부, 동북부 지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4월 섬서성(시안) 개최 “중국 동서부 협력 및 투자무역박람회”에 민관 경제사절단을 파견, “한·서북3성(섬서·감숙·영하)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환경·에너지·무역·투자 등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교역·투자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통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2) 한·EU 통상외교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1위 대한민국 투자주체로 양자간 통상·투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발효되면서 양국 교역관계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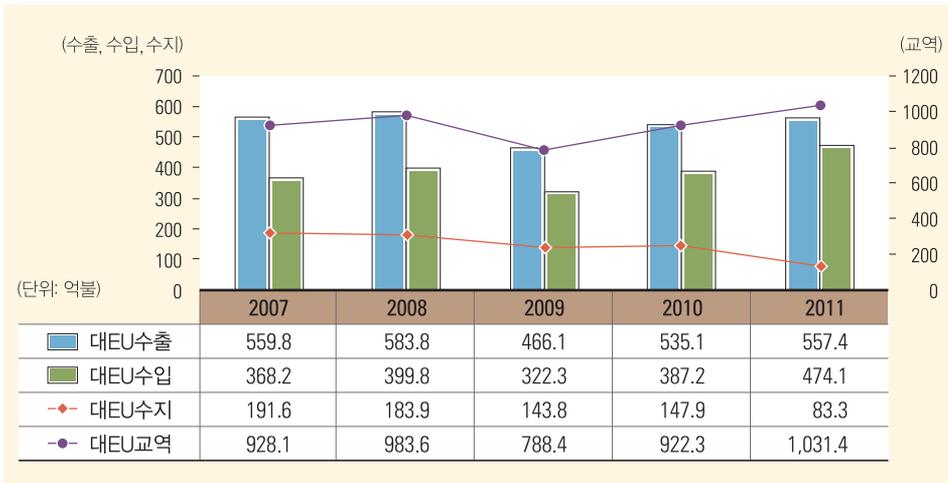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EU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EU 교역은 2009

### 》》》 2011년 우리의 대EU 교역 현황

구분	수출	수입
금액	557억 달러	474억 달러
주요품목	선박,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집적회로반도체	승용차, 반도체 제조용장비,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항공기

\*출처: 한국무역협회

### 》》》 한·EU 교역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1년 한·EU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03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총 교역의 9.5%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55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선박, 승용차,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등이었다. 한편, 대EU 수입액은 47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9%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 반도체 제조용장비,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항공기 등이었다.

또한 EU는 투자액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주체로서, 2011년 총 투자액 누계는 약 64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EU 누계 투자규모는 약 36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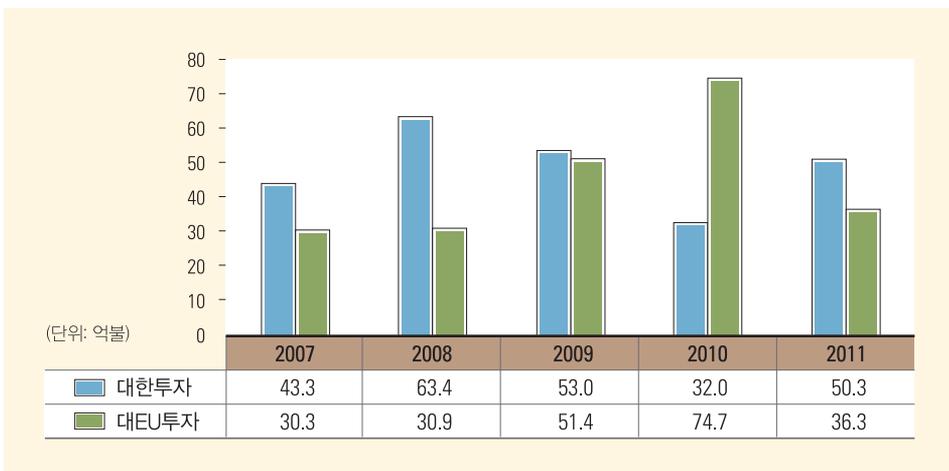
한·EU 양측은 2006년 두 차례의 FTA 예비협의를 거쳐, 2007년 5월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0년 10월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었으며, 이로써 양자간 통상관계는 규모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산업

#### 》》》 2011년 우리의 대EU 투자 현황

	대EU 투자	대한 투자
2011 투자액	36.3억불	50.3억불
투자 누계액	367.7억불(1968-2011)	647.0억불(1962-2011)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 》》》 한·EU 투자 동향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의 특성을 보완·강화하며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EU는 “한·EU FTA” 협상 출범(2007.5)을 계기로 양자간 경제·통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2008년 6월 이 협정의 개정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09년 10월 가 서명을 거쳐 2010년 5월 정식 서명하였다. 양자는 “한·EU FTA” 및 “한·EU 기본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한·EU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고 있다.

2009년 한·EU 정상회담(5.23, 서울)에서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과 한·EU FTA 체결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또한 한국과 EU는 양자 통상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매년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에 체결된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양측은 2001년부터 매년 공동위원회를 서울과 브뤼셀에서 번갈아 개최하여 양자 경제동향, 양자 통상현안 및 정책,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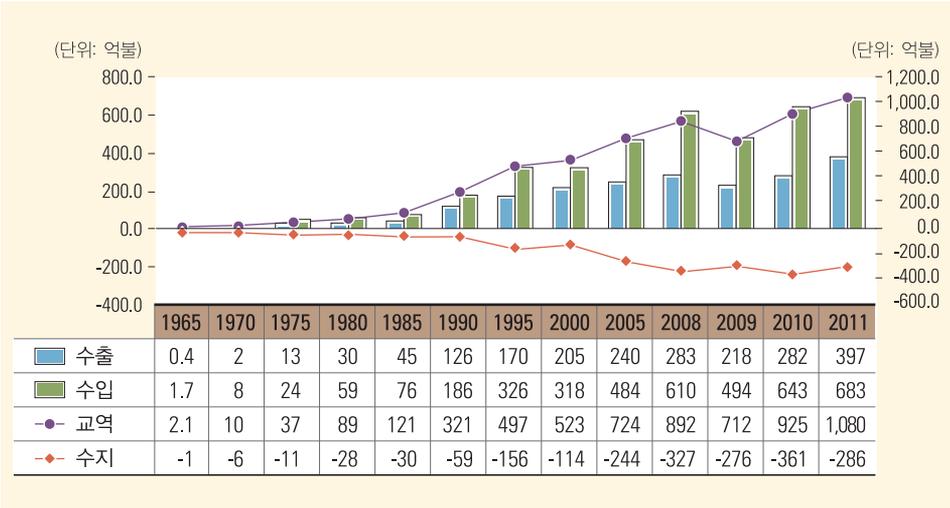
제9차 공동위(2011.6월, 서울)에서 우리측은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식품안전·보건의료 분야에서 양측 규제당국 간 협력,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우리측 관심사항을 EU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EU측에서도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위생 및 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TBT 등의 분야에서 관심현안들을 제기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례 협의체 및 수시 협의를 통해 한·EU간 통상현안이 통상마찰로 확대되어 양자간 경제·통상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상품의 대EU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3) 한·일 통상외교

한·일 경제·통상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최근 양국간 교역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들어 다시금

▶▶▶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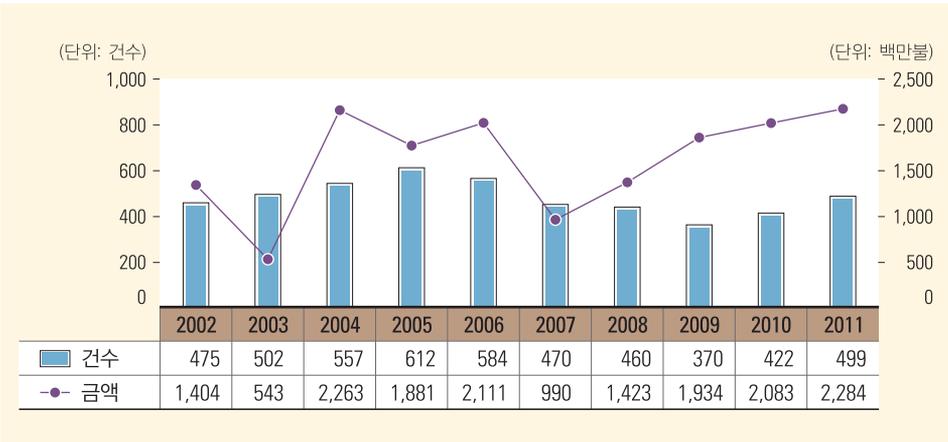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특히, 2011년 양국 교역액은 1,080억 달러에 이르러 교역 1,000억 달러 시대를 열게 되었다. 현재 일본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 교역상대국(수출 제3위, 수입 제2위)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수출 제3위, 수입 제6위)이다.

우리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 번도 대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적자 규모가 2007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3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일본 내 주요 부품·소재 공급 체계의 교란 및 지속적인 엔고 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40.9%로 대폭 증가한 반면, 대일 수입 증가율은 6.2%에 그쳐, 대일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하락한 285.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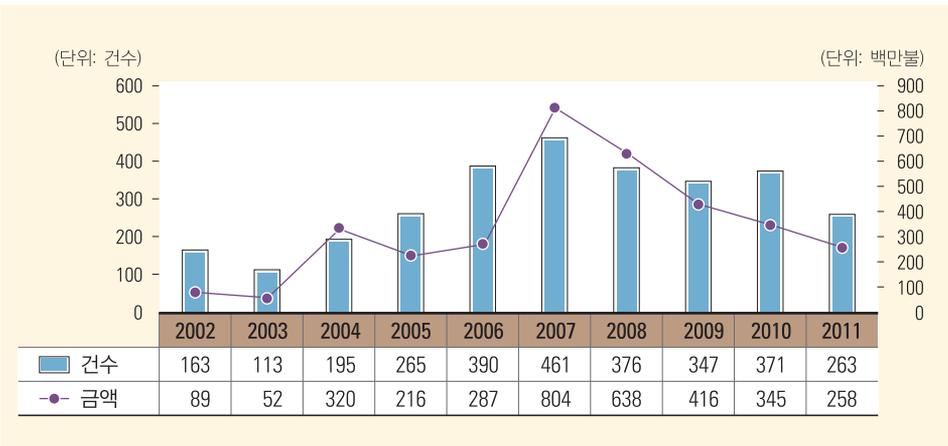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며 인프라를 조성하는 동시에, 무역적자 비중이 큰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상담회」는 양국 부품·소재 산업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구미, 익산 등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양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 최근 10년간 일본의 대한국 투자 동향



\* 출처: 지식경제부

### ▶▶▶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본 투자 동향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편,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대한 투자 국가로서 1962-2011년간 일본의 투자액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15.1%이다. 일본의 대한 투자는 2007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2011년 일본의 대한 투자는 2년 연속 2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외교장관회담, 통상장관회담 등 장관급 협의채널과 고위경제협의회,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 등 양자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양국은 2011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동북지방의 복구·부흥 및 관광 지원

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공조 차원에서 양국 간 통화스왑 규모를 기존의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한·일 FTA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간 합의한 ‘일본 동북지방 부흥·관광지원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 우리 정부는 2011년 11월 고위급 정부인사를 단장으로 한 민관 통상사절단을 일본 센다이에 파견하여, 일본정부, 기업, 단체 등과 함께 관광,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11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관계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협의하였다.

#### 4) 한·미 통상외교

현재 미국은 중국·일본·EU에 이어 우리의 제4위 교역 파트너이며, 우리는 미국의 제7위 교역상대국이다. 2011년 한·미 교역규모는 1,008억 달러로 전년(902억 달러) 대비 약 11.7% 증가하였다.

2011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56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0.1%를 차지하였으며 수출품목 중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대미 수입액은 446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8.5%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제조용장비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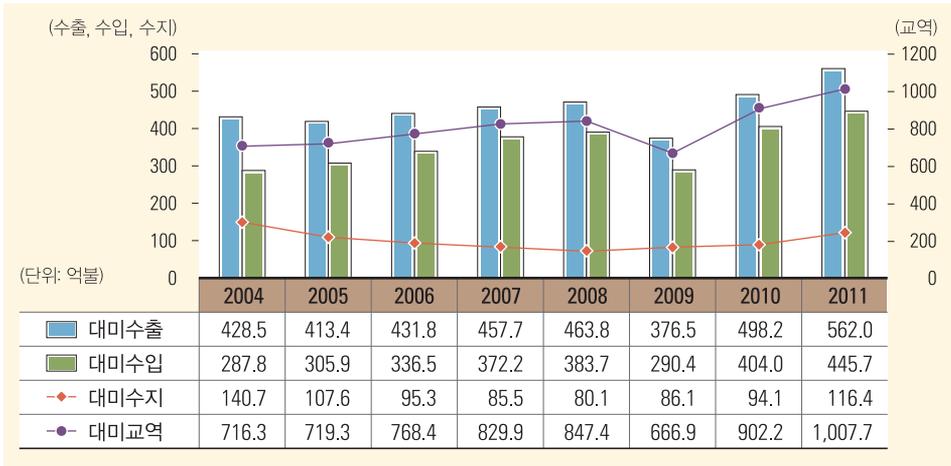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1968년-2011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누계액은 약 573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 투자총액(2,873억 달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EU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제2위 외국인 투자국으로서 1962-2011년간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약 462억 달러이다. 2011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한국석유공사의 대규모 자원투자 등에 힘입어 1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 》》》 2011년 우리의 대미 교역 현황

구분	수출	수입
금액	562억 달러	446억 달러
주요품목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석유제품 등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제조용장비, 식물성물질 등

\* 출처: 한국무역협회

## 》》 한·미 교역 동향



\* 출처: 한국무역협회

누적 투자액은 처음으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누적 투자액보다 많아졌다.

한·미 교역 및 투자는 절대액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급속한 교역확대 및 미국 시장내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sup>1)</sup>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미 교역 비중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sup>2)</sup>를 보유한 우리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우리의 입지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앞당긴다는 목표 하에 미국과의 FTA 협상을 2006년 2월 3일 개시하여, 2007년 6월 30일 최종합의문에 서명하였으며, 2010년 12월 추가협상을 타결하였다. 2011년 10월과 11월, 한·미 FTA 비준안이 각각 미 의회와 우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양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한·미 FTA를 통해 두 나라는 이미 굳건한 경제·통상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국 간 통상 마찰은 1980-90년대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의 활동범위가 크게 확대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이슈들이 통상 현안

1) 전체수출(수입)중 대미수출(수입) 비중은 2000년 21.8%(17.3%)였으나 지속 하락하여 2011년에는 10.17%(9.5%)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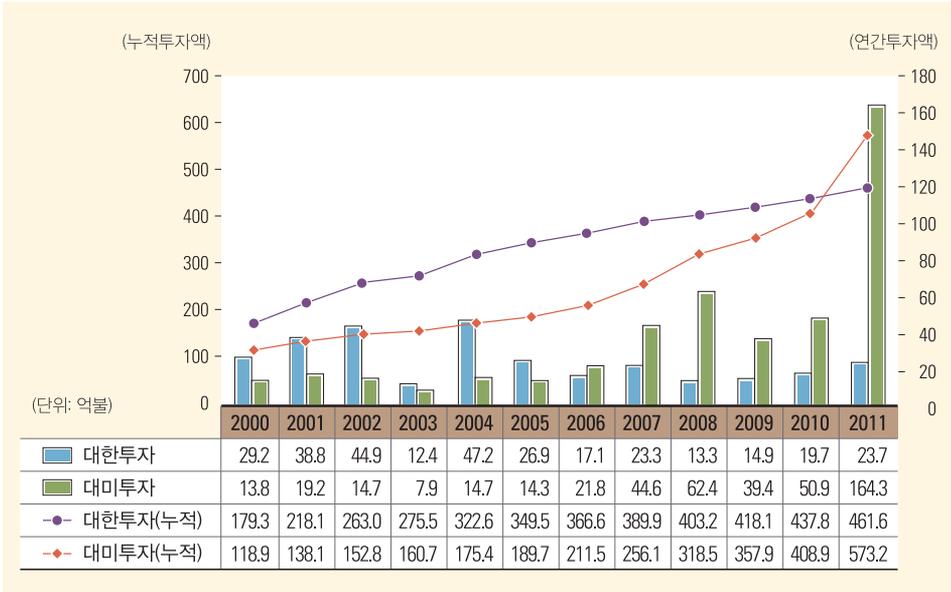
2)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2011년 미국 GDP15조 400억 달러(잠정치)

## 》》》 2011년 한·미 투자 현황

	대미 투자	대한 투자
2011 투자액	164.3억 달러	23.7억 달러
투자 누계액	573.2억 달러(1968-2011)	461.6억 달러(1962-2011)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 》》》 한·미 투자 동향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으로 대두하고 있다. 자동차, 의약품,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지적권 분야 이외에도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바이오시밀러, 금융 및 보험, 특허권 분쟁 등 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통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상문제 협의를 위해 양국 정부는 매년 워싱턴과 서울에서 교대로 2-3회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USTR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두 차례(5.12-13, 9.28-29) 협의를 개최하였다. 2001년에 시작된 한·미 통상협의를 통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국 통상관계를 원만히 관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양국간 통상현안이 통상 마찰로 발전되지 않도록 정례협의체 및 수시협의를 개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상품의 대미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2.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양자적 대응

외교통상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지역통상국내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였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외국 규제당국과의 양자교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담은 정부 입장서를 해당국 정부에 제출해 왔으며, 필요시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1년 12월 말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총 117건이며 이 중 반덤핑 조치가 92건, 상계관세 조치가 5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20건이다. 이 중 반덤핑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상계관세는 정부가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이지만, 반덤핑관세는 개별기업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했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아닌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반덤핑조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 조사당국에 분명히 알려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외국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조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에서도 취해지고 있으며,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이외에도, 품목 분류를 통한 관세 인상, 비(非)자동 수입허가제도, 라벨링 규제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응하도록 노력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입규제대책반은 정부 입장서 전달, 고위급 서한 발송, 정부간 협의시 의제화, 상대국 정부에 대한 교섭,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였다. 이 중 14건에서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1년 5월 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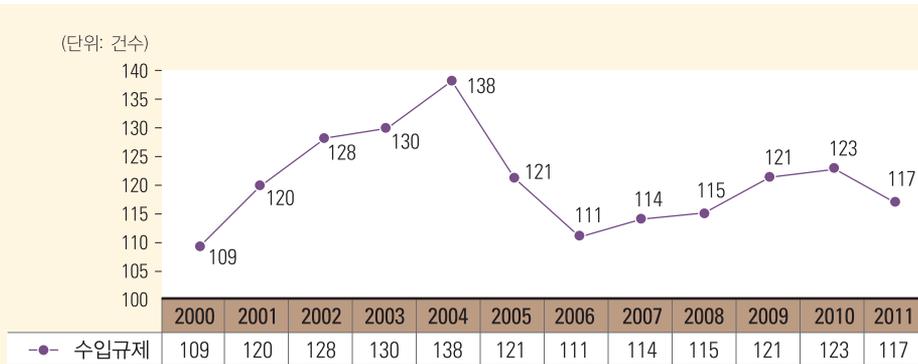
란드가 우리 업체의 LCD 패널(액정표시장치)을 관세부과 품목으로 분류한 것을, 우리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으로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결정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이다.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폴란드 및 주요 EU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경주하여 결국 우리 입장을 관철시킴으로써 우리 업체가 500억 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인해 관세부과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과되고 있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약 1억 9,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활동

-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 수입규제 조사개시 이전, 조사중, 예비판정, 확정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 회의를 개최, 업계입장을 파악하고 우리측 대응논리를 개발
- 수입규제국과 정부간 양자협의
  -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정부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업계 및 정부입장을 전달하고 협조요청
- 서한 및 정부 입장서 전달
  -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

#### 》》 연도별 수입규제 건수 추이



》》》 외국의 대한민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2011.12.31 현재)

총 117건 (조사 중 16건 포함)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1. 인도	21(2)	0	0	2(1)	23(3)
2. 중국	18	0	0	0	18
3. 미국	9(1)	0	5(1)	0	14(2)
4. 터키	5	0	0	8	13
5. 파키스탄	7(1)	0	0	0	7(1)
6. 러시아	1	0	0	4	5
7. 인도네시아	2(1)	0	0	2	4(1)
8. 태국	5(3)	0	0	0	5(3)
9. 브라질	5(3)	0	0	0	5(3)
10. EU	4*	0	0	0	4
11. 우크라이나	1	0	0	2(1)	3(1)
12. 아르헨티나	2	0	0	0	2
13. 남아공	3	0	0	0	3
14. 말레이시아	1	0	0	0	1
15. 캐나다	2	0	0	0	2
16. 이집트	2	0	0	0	2
17. 일본	1	0	0	0	1
18. 호주	2(1)	0	0	0	2(1)
19. 멕시코	1	0	0	0	1
20. 필리핀	0	0	0	1	1
21. 러-벨-카작 3국 관세동맹	0	0	0	1(1)	1(1)
<b>합 계</b>	<b>92(12)</b>	<b>0</b>	<b>5(1)</b>	<b>20(3)</b>	<b>117(16)</b>

※ ( )안은 현재 조사 중인 건수

\*우회덤핑 포함

》》》 2011년 수입규제 대응 실적

	제 품 (규제국)	연간 수출량	감축된 관세율	포기된 관세액 <sup>3)</sup>	비 고
1	LCD패널 (폴란드)	593백만불 09.5-10.12	5%	49백만불	5% 관세부와 품목으로 잠정 분류되었던 LG디스플레이 이사의 LCD 패널에 대해 무관세로 분류
2	양문형냉장고 (EU)	281백만불	0-12.2%	-	중간재심 결과 조치 종료
3	PET Chip (EU)	208백만불	2-12%	21백만불	덤핑 무혐의 입증에도 불구, 계속되는 재심 개시로 우 리 기업의 대EU 수출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현행 반덤 핑 관세율(0%)을 변경하지 않고 재심 종료

	제 품 (규제국)	연간 수출량	감축된 관세율	포기된 관세액 <sup>3)</sup>	비 고
4	냉장고 (우크라이나)	110백만불	20%	22백만불	우리측은 수입의 급증이 없고,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조사대상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 우리 입장을 관철
5	폴리프로필렌 (인도)	109백만불	22.22%	24백만불	정부입장서 전달 및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 제소 철회의 형식으로 반덤핑 조사 종결
6	PET 필름 (미국)	80백만불	0.13%	0.1백만불	연례재심 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해 조치 종료 결정
7	평판압연제품 (브라질)	60백만불	83.7%	49백만불	고위급 인사 서한 및 정부입장서 전달 등 대응 결과, 제소자측은 조사 중단 요청 ※ 제소자측은 제소장을 보완하여 조사를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
8	열연코일 (말레이시아)	54백만불	35%	18백만불	예비판정 결과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없이 조사 종결
9	스테리리스 열연강판 (인도)	28백만불	20%	5.6백만불	인도 국내산업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 한국기업에 대해 0%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10	에어컨 (아르헨티나)	7.3백만불	-	-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조사 종료
11	PET (말레이시아)	1.4백만불	17.09%	-	'11.4월 종료재심 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12	단면/양면 코팅지 (아르헨티나)	1.4백만불	46%	0.64백만불	수출량이 미미하여 조사에서 제외
13	PET (터키)	0.8백만불	6.5%	52천불	'06년 6.5% 덤핑마진 인정, '11.1월 일몰재심 결과 조치 종료
14	PVC 페이스트 레진 (인도)	0.2백만불	15%	27천불	예비판정에서 일부 우리 조사대상업체가 덤핑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입장서 전달 등 대응 결과, 최종 판정시 우리 업체 모두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아 종결
	<b>총 계</b>	<b>15.3억불</b>	<b>-</b>	<b>1.89억불</b>	<b>-</b>

3) 각 상품 연간 수출액에 변경 전·후 관세율 차이를 곱한 액수로서 실제 액수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납부하지 않게 된 비용을 의미

### 3.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참여

#### 1) DDA 협상 경과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공식 출범한 이래, 추가적인 시장 개방 및 보조금 감축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이왔다. 그러나 그간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해 미국, EU와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선·개도국간 입장 대립으로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겨 11년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DDA 협상은 발족 이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실패, 2004년 8월 기본골격(일명 July Framework) 합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개최, 2006년 7월 협상 일시 중단, 2007년 1월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 계기 협상 재개, 2008년 7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의 잠정 타협안 도출에 이은 12월 각료회의 개최 무산 등 부침이 있었다.

2009년 제7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DDA 협상 진전을 위해 2011년 기회의 창을 이용하여 막바지 협상 마무리 및 전체 협상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 발표에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연초부터 세부 협상 목표를 설정,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했으나, 당초 목표로 했던 4월 의장 수정텍스트 제출에 실패하고 대신 의장 보고서 제출로 대체했다.

2011년 12월 개최된 제8차 각료회의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설정 및 이를 위한 새로운 협상방안을 폭넓게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조기 수확 가능 분야로서 무역원활화 및 최빈국 가입절차 간소화가 언급되었다.

2012년에는 DDA 진전을 위한 새로운 협상방안에 대한 모색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하나로서 합의 도출이 가능한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수국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복수국간 협정 방식은 다자주의 원칙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주요 개도국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진행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 2) 우리의 활동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서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양자·다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11년 우리나라는 다보스 포럼 계기 DDA 통상장관회의(1월), APEC 통상장관회의(5월), OECD 소규모 통상장관회의(5월), 제8차 WTO 각료회의(12월)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선·개도국간 중재자 역할을 활용, 우리의 실질적 이해와 협상 입지를 제고하는 한편,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조치 확산 저지 및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익반영은 물론이고 WTO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아울러, DDA 분야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협상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 동향과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 입장을 적시에 파악,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핵심 이익 및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WTO 제8차 각료회의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연설(2011.12.16)

또한, 우리는 각 분야별 협상에서 공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입장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농업협상에서는 수입국 그룹 및 개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과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규범 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를 훼손하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개정을 주장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공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더하여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해집단과의 협의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

### 3)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1) 농업

2011년 농업협상에서는 연내 DDA협상 타결목표에 따라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sup>4)</sup> 잔여 쟁점 논의와 함께 자유화세부원칙 합의 이후 진행될 국별 양허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 검증과 작성양식(template) 마련을 위한 기술적 논의가 지속되었다. 자유화 세부원칙 잔여쟁점 타결을 위해서 2011년 1-4월까지 매월 공식 및 비공식협상을 통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주요국간 입장대립이 지속되어 실질적 논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양허표 작성을 위한 기술적 논의 부분에서는 회원국 제출자료 중 농업총생산량 자료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고 template 축조작업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5월 이후에는 라미(Lamy) 사무총장 주도로 12월 각료회의 계기 타결을 목표로 한 소규모 패키지 논의에 주력함으로써 농업협상은 공식협상 없이 회원국 주도로 의장작성 자유화세부원칙 초안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해석과 명확화를 위한 논의 위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업 민감성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가 포함된 기존 협상안 안정화를 위해 공조그룹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 협상에 적극 참여해왔다. 향후 협상에서도 기존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협상 진전 원칙을 토대로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시장접근 회의에서는 2008년 12월 회람된 의장 4차 수정안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바세샤(Luzius Wasescha) 협상그룹 의장은, 2008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요인 중 하나였던 분야별 자유화 관련 논의는 분야별 자유화 제안국 주도하에 참여국 확대를 위한 양자 및 복수국간 협의를 의장의 개입 없이 진행토록 하였고, 자유화 세부원칙 타결 이후에 본격 진행될 비관세장벽 수평적 및 수직적 제안서별 회의를 의장 주재로 진행하였다. 2011년도에는 분야별 자유화 논의보다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제안서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집중 전개하였다.

4)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이란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공식, 보조금감축공식 등을 포함하는 양허표 작성 원칙으로,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각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계획서(양허표)를 작성하게 된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은 산업 분야별로 전세계 교역량의 9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무세화에 참여해야 발효하기 때문에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주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협의를 진행하여 참여를 독려했으나, 주요 개도국들은 자발적 참여 원칙을 주장하며 참여 불가 입장을 견지하여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이 품목 바스켓 접근(Product Basket Approach)을 제안하고 2011년 4월 EU가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과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분야별 이해를 감안하여 전기·전자 분야에서 공동제안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EU, 대만, 멕시코, 중국 등 전기·전자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참여국 확대 노력(outreach)에도 참여중이다. 다수의 분야에서 우리에게 대한 참여 압력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화학, 보석 분야이며, 산업용 기계,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비관세장벽 협상은 관세외 모든 교역장애요소(기술표준, 적합성평가, 투명성, 수출·수입제한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기반으로 논의하고 있다. 논의 성숙도가 가장 높은 분야인 신속해결메커니즘(Horizontal Mechanism), 투명성, 섬유·의류 라벨링 등 3개 분야를 포함, 전자, 자동차 등 회원국간 비교적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7개 분야의 제안서를 우선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업계의 이익과 합치하는 수출허가투명성 제안서에 2009년 3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래, 참여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타 주요 분야에서의 문안 협상에 대비하여 수정제안서, 질의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농산물 분야는 농업분야보다 품목 수가 많고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개방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및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세적인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협상 진전을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그룹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3) 서비스

서비스 협상은 크게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국내규제 협상, 규범 협상(서비스 보조

금, 긴급세이프가드조치, 정부조달 등)의 3분야로 대별된다.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은 각 회원국이 2005년 제출한 수정양허안을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양자간, 복수국간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복수국간 협상이란 서비스 관련 총 21개 분야에서의 양허협상그룹을 구성, 복수국간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해운, 통신, 금융 등 10개 분야에서는 양허요청국으로, 법률, 시청각, 항공운송 등 8개 분야에서는 양허요청대상국으로 참여하여 왔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 NAMA 모델리티 타결이 실패한 이후 DDA 서비스 시장접근 협상도 잠정 중단되었다가 2009년 11월 클러스터를 계기로 양허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며, 2011년 4월까지 협상 타결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도출하자는 계획에 따라 2011년 2월-4월간 집중적으로 양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1년 4월 제출된 의장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국내규제 협상은 각국이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서 허가,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규제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자적 규율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2월-4월간 비공식 회의를 통해 쟁점별 집중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통합 텍스트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한편, 2011년 4월 의장 보고서에 따르면 규범 협상은 기술적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서비스 보조금, 정부조달, 긴급세이프가드(ESM) 중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최종 결과물의 대략적인 윤곽조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선도 산업이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신, 금융, 유통, 건설, 해운의 5대 인프라서비스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각국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4) 여타 협상분야 : 규범,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

##### 규범

규범 협상 분야는 “현행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 협정을 명료화(clarify)하고 개선(improve)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2001년 도하 라운드의

지침(mandate)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덤핑 프렌즈 그룹<sup>5)</sup>과 수산보조금 공조국 그룹<sup>6)</sup>을 형성하여 반덤핑 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축소와 균형있는 수산보조금 규율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1년 상반기중에는 규범협상그룹 의장 프랜시스(Dennis Francis)가 2008년 12월 회람된 의장 제1차 수정안 및 로드맵을 기초로 쟁점별 소규모 실무그룹 협상(Contact Group, Friends of Chair)을 통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반덤핑 협상의 경우, 제로잉(zeroing)<sup>7)</sup>, 일몰재심(sunset review), 최소부과원칙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수출국, 수입국, 개도국간 이견차가 여전히 지속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절차 사항 및 투명성 증진 조항에 관련한 작업 논의는 2010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었으나, 2011년에는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것으로 예상되었던 절차적 · 기술적인 내용에서도 국가들간 의견 차이가 계속되었다.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어족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의장 로드맵과 각국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금지되는 수산보조금의 범위, 개도국 특별대우 범위, 어업관리제도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제출한 제안서<sup>8)</sup>에 이어 2011년 2월에는 DDA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어업관리(FMS: Fisheries Management System) 요소와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 어업 규제 등에 대한 추가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반덤핑 협정 개정에 있어서 제로잉 금지, 자동 일몰 등 규율 강화, 수산보조금 협정문 작업에 있어서 과도한 수산보조금 금지 방지 등 우리의 핵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5) 반덤핑 프렌즈 그룹은 우리나라, 일본, 칠레, 홍콩, 브라질,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코스타리카, 멕시코, 태국, 이스라엘로 구성되는 DDA 규범협상 반덤핑 분야 논의의 핵심 공조 그룹이다.

6) 한국,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은 수산보조금 관련 공조국 그룹을 형성하여 제안서 제출, 공동 입장 정립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7) 제로잉(zeroing)은 덤핑조사에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비교시 (-)덤핑마진(정상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은 경우)을 합산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여 최종 덤핑 마진을 높이는 관행을 말한다.

8) 2010년 2월 금지보조금 축소 및 일괄(catch-all) 조항의 남용 방지, 조치가능보조금(amber box)신설, 소규모 영세 어업에 대한 일반예외 신설, 자원관리제도 역할 제고를 위한 텍스트 제안서를 제출하고, 2010년 12월에는 유류보조의 일률적 금지가 가지는 문 제점을 지적한 비공식 문서(room document)를 회람하였다.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중심으로 한 협상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WTO TRIPS 협상은 2011년 3차레 정례이사회 등을 통해 기설정되었던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다자등록처 설치뿐 아니라, GI 특별보호 확대 및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간 관계 설정 등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EU, 스위스, 인도 등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GI 다자등록처의 수립과 함께 GI 보호 대상을 포도주·증류주가 아닌 모든 상품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및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출처공개를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기 위해 TRIPS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 등의 다자등록처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GI 데이터베이스 구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포도주·증류주 외 상품으로 GI 특별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TRIPS와 CBD는 별개 이슈라며 특허 출처의 출처공개 의무화에도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TRIPS상 비위반·상황 제소<sup>9)</sup> 적용 유예의 경우, 2011년 개최된 제8차 정례 각료회의에서 차기 각료회의까지 유예 연장이 선언되어, 2013년 말로 예정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ACTA 협정은 2006년 일본과 미국이 주도한 지재권 집행 강화를 위한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으로 2008년 6월 협상이 개시된 후 총 11차레 공식협상을 거쳐 2010년 11월 최종 타결 되었다.

동 협정은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어 민사·형사, 국경조치 등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분야에서 TRIPS-plus

<sup>9)</sup> 비위반·상황제소는 1947년 GATT에서 도입되고 WTO에서 확립된 제도로서,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 체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수준의 국제 기준과 국제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27개 회원국 포함),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모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였다.

2011년 10월 1일 일본 도쿄에서 11개 협상 참여국 중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8개국(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멕시코 등)의 대표가 참석하여 동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2012년 1월중 EU 및 22개 회원국(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독일,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제외)이 서명할 예정이다.

동 협정은 미국, EU, 일본 및 주요 선진국 등이 모두 참가하여 WTO TRIPS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 규정을 보다 강화(TRIPS-plus) 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 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지적권 집행 규범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 규정의 공포 및 시행) 상의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범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과 함께 콜로라도 그룹<sup>10)</sup>을 형성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한 해 동안 7회에 걸친 무역원활화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소그룹회의, 공조그룹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상의 진전과 문안 합의에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 제안분야(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물품반출평균시간측정, 위험관리)에서 양자회의, 소그룹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공동 제안 분야(세관심사, 도착전 처리 등)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통합협정문의 간결화(clean text 작성) 도출에 기여하

<sup>10)</sup> 콜로라도 그룹이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결성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칠레, 홍콩, 대만,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모로코 등 17 개국으로 구성된다.

였다. 무역원활화 3개 주제(통과, 사전판정, 싱글윈도우) 관련 심포지엄 개최(2011.11) 계기 우리나라의 싱글윈도우 구축 경험을 발표하고, 대개도국 기술지원 관련 심포지엄 개최(2011.11) 계기에는 우리나라의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WCO 역량 강화 사업 실시 등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 노력을 설명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또다른 핵심 이슈는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문제이며 공통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무역과 환경

환경협상은 1)환경 상품/서비스 자유화, 2)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 무역의무조항(STO: Specific Trade Obligation)과의 관계, 3)WTO와 MEA간 정보교환 및 읍저버 자격 부여에 대한 절차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은 환경상품 자유화를 대비한 환경상품의 범위 설정문제이다.

환경상품 선정 관련, 선·개도국 간의 입장 대립이 계속되자 회원국들은 환경상품리스트 축소·선별 작업을 개시하였다. 2009년 10월 환경프렌즈그룹은 비교적 컨센서스가 높은 153개 상품을 선정한 통합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뒤이어 2010년 일본,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등이 관심환경상품목록을 제출하였다. 2011년 1월 의장을 중심으로 총 424개 상품을 공기오염통제, 재생에너지, 폐기물 관리 및 하수처리, 환경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각 품목의 환경적·경제적 편익, 이행관세율·실행관세율·수출입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회원국들은 특별·정례회의(2월, 7월, 11월) 각각 총 3회, 프렌즈그룹(Friends of the System)<sup>11)</sup> 대사급회의 및 실무회의 총 6회(2월, 3월, 5월, 6월, 7월, 11월)를 통해 환경상품목록 검토 및 환경 관련 제도,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정도(treatment) 및 환경서비스, 개도국 기술지원(Technology Transfer),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관세장벽 감소 및 철폐 등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sup>11)</sup> Friends of the System란 미국, 중국 등 협상 핵심 국가에 속하지 않는 중견국가 모임으로 DDA협상 타결을 통한 다자통상 체제 강화를 도모하는 그룹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위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19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정부조달

1997년부터 협정문 개선 논의가 개시되고, 2004년 7월부터 양허확대 협상이 본격 진행된 GPA 개정 및 양허확대 협상이 2011년 12월 15일 타결되어 전자조달 등 조달 관련 기술 발전상을 반영하고, 조달절차, 양허 변경절차 및 개도국 우대조항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였다. 또한 각국은 양허기관 추가, 양허 하한선 인하 등으로 양허를 확대하였다.

우리나라는 개정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중소기업 우대조치에 대한 협정 적용 예외주석 유지, EU와의 도시철도 분야 조달 상호 개방, 우리 정부의 급식조달에 대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주석 신설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4. 경제 각 분야 협력외교 기반 구축

최근 에너지안보와 기후온난화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수단으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통상부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협력 증진과 이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1)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주요 원전 수출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 수출 유망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과 인도는 2011년 3월 한·인도 원자력협력협정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고, 7월 인도 파틸 대통령 방한 시 서명하여 10월에 협정이 발효되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9월 리야드에서 정부간 협상을 개최하여 문안에 합의하고, 11월 한·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알제리, 멕시코, 태국, 핀란드, 헝가리, 유라툼 등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 주요국과의 항공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의 항공자유화 추진을 통해 우리 항공사 운영 효율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달성하여 인적·물적 교류 기반을 지속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2011년 4월 중국과 김포-북경 노선을 개설기로 합의하고, 2011년 11월에는 대만과 김포-송산 노선 개설을 합의함에 따라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이 제의한 북경-김포-하네다(BeSeTo) 셔틀노선망을 완성시켰다. 새로운 국가와의 항공협정 체결 노력도 지속하여 4월에는 파푸아뉴기니아와, 9월에는 에콰도르와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를 이루었고 페루와는 11월에 항공협정 서명을 완료하였다.

## 3) 투자보장, 이중과세, 사회보장 등 경제관련 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 투자 시에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장애 등 비상업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한·우루과이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에티오피아, 파푸아뉴기니아 등 10여 개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해외파견 우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 경감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2011년 인도, 덴마크와 협정 체결이 완료 되었고 스페인과 문안에 서명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소득 발생 시 이중과세 부담 방지를 위하여 2011년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페루, 에콰도르, 브루나이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 1.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의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재외공관에 ‘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KOTRA 등 공공기관 및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지원반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경제4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에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대사와 총영사가 직접 기업인들과 1:1 상담을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08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요청으로 연례행사로 정착하였으며, 상담건수와 참여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2008년부터 6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는 대상 재외공관 수가 19개로 확대되었다.

- 2011년(19개) : 주중국대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타이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니카라과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온두라스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주루마니아대사관,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남아공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통상투자사절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 등에 파견하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수입업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10여회 이상의 통상투자사절단을 파견중이다. 2011년에는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14회 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장 상담액 및 계약액 3.7억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과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 시장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농림부와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세계 각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에서 농식품의 수출확대 및 한식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sup>1)</sup>

2011년부터는 재외공관 주도로 현지 진출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해에 81개 공관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비즈니스 애로해결 지원, 국책사업 수주지원, 경제협력 포럼·세미나 개최,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 활동 등 총 98건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UN 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UN 조달시장 설명회’를 민관합동으로 9차례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up>1)</sup> 2011년 전세계 33개국 49개 재외공관에서 농식품 수출 및 한식 세계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개최

## 2.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통해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2008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미국 경제의 하강세, 금융시장의 혼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한 1조6,0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투자 위축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FDI 유치가 전년 대비 급감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114.8억 달러로 2년 연속 110억 달러대를 기록하여,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에는 13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1년에도 136.7억 달러를 기록한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 》》》 우리나라 FDI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고액	11,566	11,247	10,515	11,711	11,484	13,070	13,670

\* 출처: 지식경제부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Invest Korea 등을 중심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국내 영업환경에 대한 해외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외공관에서는 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주재국내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한

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FTA 및 양자 투자협정 체결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선된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등 앞으로도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경제통상 정보 제공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입수한 각국의 정부조달 및 입찰정보 등을 국내 유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E-mailin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sup>2)</sup>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최근시장정보란 및 해외입찰정보란을 각각 개설하여 각종 경제통상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들이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 입찰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2월부터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서비스란을 개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주재국 시장 관련 문의에 대해 1:1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우선, 1998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의 통상환경을 분석·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하여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sup>3)</sup> 또한, 외교통상부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통상 마찰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통상 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2) 전경련, 대한상의, 해외건설협회, 부산시, 경상남도 등 45개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총 1,186건의 정보메일을 제공하였다.

3) 2011년판 「외국의 통상환경」은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및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금융 등 15개 분야별로 각국의 통상장벽 관련 정보를 분석, 정리한 총론적인 성격의 '분야별 통상환경'(1권)과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아프리카·중동, 유럽 등 4개 지역의 국가(총 85개국)별로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관계, 각종 통상장벽 현황 등을 분석, 정리한 각론적 성격의 '지역별 통상환경'(4권) 등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 1) 여수박람회 준비 현황

2007년 11월 27일 제14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총회에서 여수의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 체계적인 여수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2008년 3월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이 공포·시행되었다. 정부는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차장)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총회, 집행위원회에 각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에 외교통상부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 2)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교섭

2008년 5월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여수박람회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여수조직위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12월 2일 제144차 BIE 총회에서 여수박람회가 BIE의 공식 인정<sup>4)</sup>을 받게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여수조직위원회와 함께 2009년부터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참가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전세계 재외공관의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총 104개 국가 및 UN, OECD 등 10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하여, 100개국 5개 국제기구 유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재외공관을 통한 여수박람회 홍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4)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는 EXPO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국제박람회 운영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가입하여 정식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동 기구의 공인을 받는 경우에만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BIE의 공인 박람회는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와 인정박람회(Recognized Expo)로 나누어지는데, 등록박람회는 매 5년 마다 개최되는 반면 인정박람회는 등록박람회 사이에 1회 개최된다.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인정박람회이며, 참고로 2010 상하이 엑스포는 등록박람회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 명칭 | 2012 여수세계박람회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 기간 | 2012. 5. 12-8. 12(3개월)
- 장소 | 전남 여수시 여수신항 일대(174만㎡)
-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  
(The Living Ocean and Coast: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 참가규모 | 104개 국가, 10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16개 지자체
- 예상관람객수 | 약 800만 명(국내 745만 명, 외국 55만 명)
- 기대효과 | 생산유발 12.3조원, 부가가치 5.7조원, 고용유발 7만9천명



